

2014년 6월 28일 시행 [서울시] 지방직 7급 행정학[A 책형]

KG Passone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해설강의 : 2014. 7. 2(수) 14:00~15:00

총 평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KG 패스원 한교고시학원 / 행정학 박사 김만식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서울시 시행 _ 7급 서울시 지방직 ‘행정학’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 9월에 실시되었던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와 비슷한 수준의 난도를 보였으나, 한국의 행정법령 문제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규제영향분석’ 문제와 정부 3.0과 관련된 ‘플랫폼 정부’ 문제가 시사적인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3. ‘이론과 법령’분포(총20문항 중)는 ‘행정학이론 13문항’, ‘한국의 행정법령 7문항’입니다.
4. 단위별 출제분포는 ‘행정이론(기초이론 + 환류)(3문항 15점), 정책론(3문항 15점), 조직론(5문항 25점), 인사행정론(2문항 10점), 재무행정론(4문항 20점), 지방행정(지방자치)론(3문항 15점)’으로서 조직론과 재무행정론 분야의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이상의 출제문제 경향을 고려하여 수험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제위원의 전공분야가 어느 분야가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정학 시험과 관련된 출제분야는 균형 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2. 4문항~7문항 정도 고난도로 출제되는 한국의 행정법령(한국의 행정제도)을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3. 최근 정부개혁과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한다.

2014. 6. 28. 시행 (서울시 지방직)
7급 행정학 출제문제 분석 [A책형]

1. 이론과 행정법령(한국의 행정) 출제분포

- (1) 행정학 이론[13문항 65점]
 (2) 한국의 행정법령[7문항 35점 - 1번, 4번, 12번, 14번, 15번, 16번, 18번]

1번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2번 국가공무원법, 14번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15번 대한민국헌법, 16번 국가재정법, 18번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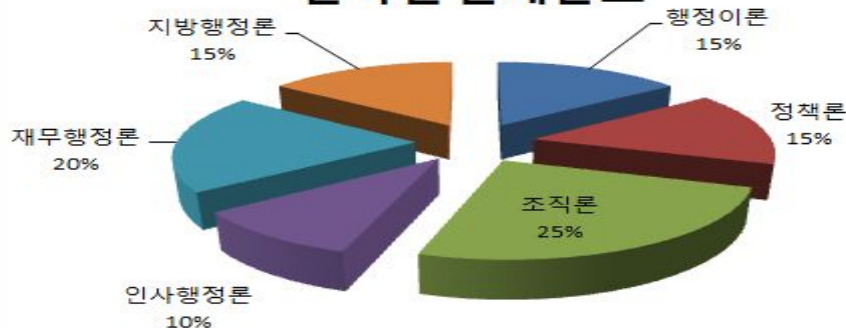
이론과 법령 출제분포



2. 분야별 출제 분포

- (1) 행정이론(기초+환류)[3문항 15점] : 공유제, 사회자본, 정부3.0(플랫폼정부)
 (2) 정책론[3문항 15점] : 특정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규제영향분석
 (3) 조직론[5문항 25점] : 경합가치모형, 관료제론, 맥그리거의 X-이론, 조직문화의 접근방법, 거래비용이론
 (4) 인사행정론[2문항 10점] :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 계급제
 (5) 재무행정론[4문항 20점] : 회개연도개시 전에 예산배정, 우리나라 예산의 특성,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방안, 전통적 예산원칙
 (6) 지방행정론(지방행정론)[3문항 15점] : 주민소환제,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시민의 행정참여의 역기능

분야별 출제분포



2014. 6. 28. 서울시 시행
서울시 지방직 **7급 행정학(A책형)**

문 1.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1111~1112.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지방행정(지방자치)론 특강 _ 2014년 대비 Point 행정학 교재 p. 1111~1112.

★2014년 5월~6월 Point 행정학 7급 국가직·서울시 지방직 대비 실전동형모의고사 문풀 6강 21회 문 18. _ 6월 12일(목)

정답 ▶ ② [해설] ▶ 지방자치법[시행 2014.1.21.] [2014.1.21., 일부개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 2012.7.22.] [2011.7.21. , 타법개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번 해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

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2번 해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3번 해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5번 해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4번 해설)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직접참여방식**이다.

문 2.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178.

정답 ▶ ④

[해설] Garret Hardin(1968)은 합리선택제도주의 입장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나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도구가 바로 ‘제도’로 본다. 합리선택제도주의에서 ‘제도’란 개인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강제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일종의 사전적 협상을 의미한다. Hardin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주장한다. 일정한 면적의 목초지를 두 목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지의 경우에 두 목장이 서로 협조를 하지 않고 각자 개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게 되면 둘 다 멸망하게 된다고 본다. 상호 협조와 타협이 있어야 전체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부터 개인이익 추구의 극대화가 공익의 파멸로 귀결되는 것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문 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222, 455.

정답 ▶ ②

[해설]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신뢰수준이 높다.

②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신뢰, 성과참여, 네트워크, 결사체를 들 수 있으며, 안전성, 협력, 박애정신, 봉사, 사회적 규범, 사회적 후원구조, 정치적 효능감, 상호성, 이타성 등이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사회자본은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한다.

④ 사회자본은 정보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⑤ 사회적 관계는 호혜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구성원들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를 갖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친사회적 행태).

문 4.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 ③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 ④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409~413.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1회, 주제 14. 30~33쪽

정답▶ ① [해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 2014.5.28.] [2014.5.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2013.3.23., 타법개정]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문 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316, 397~406, 416, 997.

★2014년 5월 2일(금) Point 행정학 아침무료 특강_ 주제 2번 3번, 3쪽

★2014년 5월~6월 Point 행정학 7급 국가직·서울시 지방직 대비 실전동형모의고사
문풀 2강 6회 문 5. _ 5월 15일(목)

정답▶⑤ [해설] ①번 해설 :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②번 해설 : 내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③번 해설 : 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양적 평가(계량평가)와 질적 평가(비계량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 양적 평가 혹은 계량평가는 주로 정책집행 결과 나타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 실적치, 비율 등 수치화돼 있는 소위 ★강성자료(hard data)들이 활용된다. 양적 평가는 평가되는 자료의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객관적인 평가가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질적 평가 혹은 비계량 평가는 정책사업 수행 과정의 난이도, 수치화해서 측정이 어려운 사업 결과 내지는 산출물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활용되며 주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된다. 이 평가 방법은 그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주로 면접, 관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축적된 ★연성자료(soft data)가 활용된다.

④번 해설 : 논리모형(logic model) 혹은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를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로 정리해 표현해주는 하나의 다이어그램이자 텍스트로 볼 수 있다.

◆ 프로그램 논리모형

㉠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 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 와 '정책집행 실패' 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⑤번 해설 :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에 근거해 **사업 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성과계획서상 **전체 성과 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단위사업)**가 대상이 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를 사용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별로 단계 등급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성과에 따라 사업별 예산 증액 또는 감액형식**으로 환류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시행 2014.4.2.] [대통령령, 2014.4.1., 일부개정]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재정사업자율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초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제4조(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문 6.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퀸과 로브그(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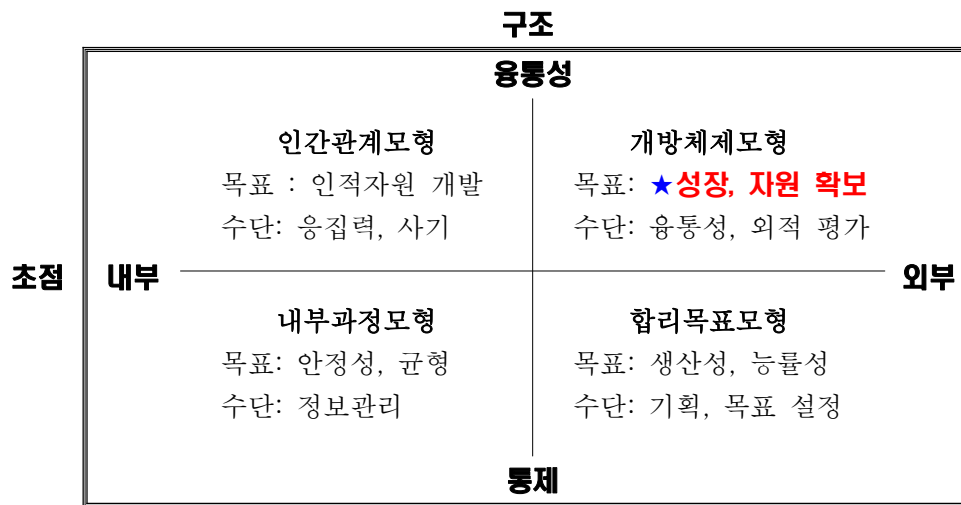
-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501.

정답▶④ [해설]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경쟁가치적 접근방법의 효과성 기준>

모 형	강조점	효과성 기준	
		수 단	목 적
인간관계 모형	인간, 유연성	응집성과 사기의 유지	인적 자원의 개발
개방체계 모형	조직, 유연성	응집성과 준비성 유지	성장, 자원 획득, 외부지원
합리적 목표모형	조직, 통제	계획, 목표 설정, 평가	생산성, 능률
내부과정 모형	인간, 통제	정보관리, 조정	안정, 균형성 유지



문 7.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47~49, 315.

★2014년 5월 2일(금) Point 행정학 아침무료 특강_ 주제 3번, 6쪽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1회, 주제 3. 4쪽

★2014년 5월~6월 Point 행정학 7급 국가직·서울시 지방직 대비 실전동형모의
고사 문물 6강 23회 문 3. _ 6월 12일(목)

정답▶③ [해설]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다. 규제는 한번 도입되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을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는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해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규제설계를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에 규제영향분석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행정규제기본법[시행 2013.8.17.] [2013.7.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문 8.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461~462.

정답▶③

[해설] M. Weber는 이상적인 관료제로서 자격과 능력에 따른 직원의 임명(능력주의)을 주장하였다.

[해설] ②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의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조직을 창설한다고 본다.

-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내부화(조직창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③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조직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래의 내부화(조직의 창설, 통합)'가 효과적이라는 이론이다.
-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도 포함된다.
- ⑤ 거래비용이론은 공공조직보다는 민간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문 12.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842, 843, 844, 849~850.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 3회, 주제 24, 56~70쪽

정답 ▶ ① [해설]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4.8.] [2014.1.7., 일부개정]

1번 해설 :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 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번 해설 :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3번 해설 : 권고사직은 직권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나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강제퇴직이다. 권고사직은 흔히 징계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가혹한 징계를 모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대량 숙정 작업 시 비공식적 징계수단으로 이용된다.

4번 해설 :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한다.

5번 해설 :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문 13.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④ 해당 직무에 책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730, 737.

정답 ▶ ③ [해설] (1) 계급제의 장점

-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넓은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 가능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직위를 거치게 되므로 권태감이나 사기의 저하를 예방
 ⇨ 업무성과의 향상과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공헌
 ㉢시야와 이해력이 넓고 타 직원·기관과의 협력 협조 용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있어 더 강한 안정감을 제공
 ㉤인사배치상의 기회(승진·전직·전보 등)에 있어서 심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신축적인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용이

[2] 계급제의 단점

㉠행정전문화 저해 ㉡조직설계와 인사행정의 합리화 요청, 형평성 제고의 요청에 대응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엄격한 계급구분의 경직성 ㉣‘계급’ 또는 ‘계서적 집단’들은 폐쇄화되고 상호 배타적인 긴장과 갈등을 조성 ㉤계서적 집단의 성원들은 집단이익의 옹호에만 집착 ㉥승진과 보수의 결정에서 선임순위(연공서열)만을 고려 ㉦보직결정에서 개인의 관심과 희망 무시 ㉧비민주적인 사회계층화를 초래

문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과년도 지출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여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881.

정답 ▶ ① [해설] ① 과년도(지난연도) 지출 :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지출

국가재정법 [시행 2014.4.2.] [법률 제12161호, 2014.1.1., 일부개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타법개정]

제16조(예산의 배정) 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문 1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

률로 규정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871, 898, 901~902.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 4회, 주제 46, 109 쪽

정답▶⑤ [해설] 우리나라 국회는 법률안과는 달리 예산안심의를 전면 거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을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876~877.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 4회, 주제 47, 114 쪽

정답▶⑤ [해설] 국가재정법[시행 2014.4.2.] [2014.1.1., 일부개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 17.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918~920.

정답 ▶ ④

[해설] ④는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관리 지향적·행정국가적 예산원칙)에 속한다.

문 18.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 ① ㉠, ㉢, ㉤ ② ㉠, ㉣ ③ ㉠, ㉢, ㉣
- ④ ㉠, ㉣ ⑤ ㉠, ㉡, ㉤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1092~1093, 1088~1089.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지방행정(지방자치) 특강 _ 교재 p. 1092~1093, 1088~1089.

정답 ▶ ⑤ [해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1987.10.29., 전부개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 2014.1.21.] [2014.1.21., 일부개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생략...)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시행 2014.5.14.] [2014.5.14., 일부개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 19.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역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630, 1118.

정답▶ ⑤ [해설] 시민의 행정참여는 시민의 정책순응을 강화시킨다.

문 20. 최근 정부의 정부3.0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2014년 시험대비 7급 Point 행정학 교재 p. 198~200.

★2014년 2월 21일(금) Point 행정학 아침무료 특강_ 주제 3번, 4쪽

정답 ▶ ② [해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행정정보공개제도 개혁추진 내용

㉠ 정부 1.0 :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 정부 2.0 :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부

㉢ 정부 3.0(★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개혁) :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화한 새로운 정부(2013년 6월 19일 ★안전행정부장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

㉣ 정부 3.0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처 간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박근혜 정부가 정부개혁의 핵심으로 공약한 내용으로 이의 세부적인 과제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나눌 수 있다.

<플랫폼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정부3.0과 유사한 개념으로 열린정부(Open Government), 스마트정부(Smart Government),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 플랫폼정부(Platform Government),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등이 있다.

플랫폼(platform)은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을 틀 또는 장(場)을 제공하고, 이들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 또는 매개체이다. 플랫폼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이익·가치가 증대되는 특징(네트워크 효과)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정부’는 정부가 기업·국민 등 고객·이해관계자에게 ‘참여형 오픈 플랫폼(participative open platform)’을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지원하는 정부의 기능·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직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